

종합 최악의 위기 OBS,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리에 모인 OBS 구성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계, 업계 전문가, 정치권 모두 대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후속 조치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면**

기획 MWC 2017 폐막

'모바일, 다음의 요소(Mobile, The Next Element)'라는 주제로 열린 MWC 2017에서는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6면**

오피니언 [칼럼] 밀 실타파

융합 시대에 걸맞게 C-P-N-D 사슬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칸막이를 쳐서 시대를 선도하는 콘텐츠 포맷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7면**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50호

2017년 3월 8일(수)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아쉽게도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특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수수 공모자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뇌물이 모두 4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출발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 추혜선 의원 “권력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일 포기해선 안 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놓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안건조정위원 즉각 선임,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등의 뜻을 들고 릴레이 농성까지 벌였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과 노동조합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는 커녕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학 대표 3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언론장악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촛불 민심에 따르기 위해선 무조건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미방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언론 3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

민의 품으로’ 토론회에서도 언론장악방지법의 필요성과 통과 의지는 재확인됐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했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국정농단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요구인 언론 개혁은 공영방송 정상화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사를 했다. 박 의원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신의 홍보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언론이나 방송을 장악하려는 낡은 질서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말 그대로 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는 점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은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횡포로 언론장악방지법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그 사이 MBC에선 ‘알박기’ 사장 선임이 이뤄졌고, KBS에서는 ‘잡포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인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탄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언론장악방지법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여야 동수 추천 이사회,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물론 언론장악방지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완전한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이 훼손됐다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적 혹은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언론장악방지법에) 제시된 제안들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도 “우리의 논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오늘 토론회

의 제목도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회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까다”라고 말했다. 언론장악방지법 통과가 끝이 아닌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장악방지법에 담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몇몇 토론회자들은 정당 추천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독일 공영방송도 정당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의 편을 드느라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대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도 고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목적에 취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도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지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

다’는 게 가능하다”며 “전문성이 무엇인지, 대표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방송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혜 대구대 교수는 “국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봤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언론계와 학계 등으로 내부 청문회를 마련해서 내부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만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다수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그 무엇보다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방지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올해만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에 10번 정도 나온 것 같다”며 “요즘 드는 고민은 모델 자체의 적합성이 아니라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왜 아직도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5월 말 UHD 본방송 앞두고 지상파 3사 본격 시동 KBS와 MBC는 2월 28일부터 시험방송 돌입 SBS는 이미 지난해 12월 UHD 시험방송 시작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오는 5월 31일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앞두고 본격 시험방송에 들어갔다.

KBS는 2월 28일 지상파 UHD 방송 첫 전파를 발사하고 UHD 시험방송에 돌입했다. 고대영 KBS 사장은 이날 새벽 KBS 신관에서 열린 ‘지상파 UHD 시험방송 기념식’에 참석해 “방송 역사에 기록

될 세계 첫 지상파 UHD의 큰 걸음을 KBS가 내디뎠다”며 “UHD 방송은 최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지상파 방송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방송은 서울 남산과 관악산, 수원 광교산에 구축한 UHD 전파 송신 설비를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KBS의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시험방송 동안 KBS1 UHD 채널에서는

UHD 화질로 특별 제작된 다큐멘터리 <먼 바닷 거문 땅>과 <백두산> 등 6개 콘텐츠가 반복 방송되고, KBS2 UHD 채널에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함부로 애틋하게>, 교양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 5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KBS는 “UHD 본방송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UHD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양

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지상파 홈포털>을 준비해 시청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BC도 2월 28일 지상파 UHD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MBC는 시험방송에 앞서 원활한 UHD 본방송과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위해 2월 25일부터 이를 동안 ‘2017 WCF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를 UHD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MBC 관계자는 “보다 생생한 영상 전달을 위해 기존 디지털 방송 대비 영상 화소 수만 커진 UHD 방송에 머무르지 않고 HDR(고명암비), BT2020(색영역확대)을 적용한 실감 영상 테스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수목드라마 <자체 발광 오피스>를 주말 재방송으로 편성해 고화질(HD) 방송과 동일한 시각에 UHD 제작본을 송출할 예정으로 국내 최초로 HD와 UHD 동일 편성 원칙을 적용한다.

이미 지난해 시험방송에 들어간 SBS는

같은 달 국내 최초로 도입한 UHD 중계차를 활용해 강릉에서 개최된 ‘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UHD로 생중계했다.

SBS는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해 국내 UHD 방송 표준에 부합하는 방송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SBS 목동사옥과 관악산 송신소에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방송 UHD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SBS의 시험방송은 목동사옥 내 주조정실부터 IP 기반의 송출 시스템을 거쳐 관악산 송신소까지 전달된 방송 신호를 국내 가전사의 UHD 수상기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시험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매가 시작된 ATSC 3.0 방식의 UHD TV가 있어야 하며, 기존에 판매된 DVB-T2 방식의 UHD TV를 소유한 가구는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51호는 4월 12일에 발행됩니다.

‘4기 방통위원 선임’ 논란 속 강행

자유한국당 김석진 상임위원 연임 결정

더불어민주당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종 후보 결정…내정설 등 잡음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 논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MBC 기자 출신인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을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원장을 최종 후보로 올렸다.

국회는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안을 재적 257명 중 21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상임위원은 1984년 MBC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OBS 경인TV 보도국 국장, 이사, 연합뉴스 TV 상무이사과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에는 새누리당 공보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월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허원제 현 청와대 정부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돼 남은 임기를 수행했다.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김 상임위원의 임기는 3월 27일부터 3년이다.

민주당은 2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하고 3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2월 2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갑자기 최

전 원장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최 전 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경수 전 KBS 기자,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 등을 후보로 놓고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분야의 경력·전문성 등을 미뤄 볼 때 안정상 전문위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2과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ICT와 방송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었고, 최진봉 교수는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오비맥주 전무·정책홍보 사장 등을 역임한 최 전 원장을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민주당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연세대 행정대학원 동문인 최 전 원장이 내정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최 전 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은 ICT 정책 능력에서 다른 후보를 앞서 최종 후보로 정

해졌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4기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차기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돌입하면 정부에도 선임 발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월 25일 김석진 방통위원 유임(여당 추천 몫)과 석제범 청와대 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정부 추천 몫) 내정설을 전하며 “민주당은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알박기 명분만 내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천하는 인물은 국회에서 부결하고, 각 당이 추천하는 인물만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여전하다.

언론노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벗어난 적극적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4월 초 공석이 되는 방통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의 설부른 행보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추천 몫의 1명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2인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 추천 위원(고삼석 상임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1인을 민주당이 먼저 추천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통위, 광역시-강원 지역 지상파 UHD 허가 7월에 결정 지역 방송사의 UHD 시설 투자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 2단계 지역인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여부가 오는 7월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시 및 강원(평창·강릉 일원) 지역 18개 방송국에 대한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 기본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라 오는 12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에 지

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수 있도록 5월까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부터 허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해 7월 중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 항목은 총 5가지로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만 허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신규 허가 신청서를 낼 때부터 철저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역 방송국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대비해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도 광고 수익 급감에 따른 재정 문제로 UHD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에 비해 더 경영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방송사에서 투자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도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UHD 방송을 위한 시설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역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송출과 송신 등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 147개 방송국과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플랫폼보다 콘텐츠…차기 미디어 부처는 ‘콘텐츠’ 중심으로? 신문vs포털 전재료 논쟁, 정보 공개로 합의 이끌어야

차기 정부에서는 플랫폼과 매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우선하고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형태의 미디어 전담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가 3월 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에서 과학을 분리하고,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신문·출판 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일부를 통합해 미디어 전담 부처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과 매체를 넘나들며 영역 없이 통합하고 융합하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를 미래

부 중심의 체제로 통제·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미디어 전담 부처의 핵심은 ‘콘텐츠’다. 김 교수는 “콘텐츠가 앞장서고 나머지가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며 매체·플랫폼의 구분 없이 모든 콘텐츠를 같은 선상에 두고 그 아래에 매체·플랫폼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신문사라고 해서 종이 신문의 뉴스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뉴스, 카드 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 통신사 등 다른 매체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사는 글로 된 뉴스, 방송사는 영상으로

된 뉴스처럼 매체에 따라 콘텐츠의 특성이 결정되던 때는 지났으며, 지금처럼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 등 매체·플랫폼으로 산업을 구분하고 각 정책을 추진해서는 현실과 괴리될 뿐이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사 간에는 콘텐츠의 가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사는 포털사가 매년 거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전재료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신문사가 콘텐츠 제작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는지, 어떻게 산출한 콘텐츠 비용인지 증거도 없이 콘텐츠 가격만 올리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콘텐츠를 아우르는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정

보, 즉 신문사의 콘텐츠 제작 비용과 포털사의 뉴스를 통한 수익 등을 공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만 정부가 도와준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당한 논리를 통해 시장 내에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미디어 전담 부처 외에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고, 민영 미디어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고 공영 미디어는 이 기구의 규제로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는 “합의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민영 미디어와 공영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순희 sh45@kobeta.com

이달의 말말말

“김장겸 MBC 사장은 반쪽짜리”(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월 28일 MBC 사장 선출 및 임원 인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외양은 다수결로 포장돼 있으나 소수 이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배제된 채 여권 추천 이사들만 모아서 선출한 ‘반쪽짜리 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이어 “사전내정설이 제기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불의한 결정’에 대해 시청자인 국민들은 용납도, 수용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장겸 MBC 사장 선임 기사 댓글을 보면 ‘MBC를 폐쇄하라’, ‘MBC가 지상파라는 게 기가 막힌다’, ‘청와대 대변인 같은 MBC 뉴스 하지 마’, ‘MBC는 사실상 모든 경영진이 사퇴해야지’ 등 MBC의 보도와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연말에 예정된 MBC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재정립하

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장 선임 문제도 재허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제도는 해당 방송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공영방송이 법에 규정된 공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 또한 가능하고, 때문에 공영방송 경영진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상임위원은 김장겸 선임 사장이 단행한 지역 MBC 임원 인사도 언급했다. 그는 “안광환 전 사장 체제 아래서 불공정 보도와 노조 탄압 등으로 공영방송 MBC를 철저히 망가뜨린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김재철, 안광환 사장으로 이어지는 독단적, 독선적 경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임 사장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용어

보그 Borg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로건>에는 2029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무인 트럭이 고속도로 위를 쉴새 없이 왔다갔다하며 물류를 배송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것이 영화적 상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 실행하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 ‘보그(Borg)’다

지난 1월 12일, 휴머니이징테크(Humanizing Tech)의 블로그에 ‘아마존의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 보그’라는 글이 올라오며 이 비밀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렸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입을 다물고 있으나 아마존이 공개한 ‘아마존 고(Amazon Go)’에 적용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살펴보면 아마존은 지도 작성 기술, 머신러닝과 딥러닝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과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드명 보그는 영화 <스타 트렉>에 등장하는 외계 종족인 보그족에서 따온 것으로, 이 종족

은 모든 개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단일 개체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집단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며 강해진다. 바로 집단 사고(Group-think)인데, 이처럼 차량 간(Vehicle to Vehicle, V2V) 혹은 차량과 인프라 간(Vehicle to Everything, V2X)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보그 프로젝트다.

1월 17일 아마존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차선배정’이라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서로 협동해 차선을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마존은 탐구하고 있지만 여러 외신에서는 아마존이 자율주행차, 특히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물류 배송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화 속 미래가 아마존의 손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되는 시점이다.

전순희 sh45@kobeta.com

조용할 날 없는 ‘MBC’ 언제 정상화되나

MBC 노조 “김장겸 씨, 사장으로 인정 못 해” 출근 저지

방문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보도본부장 신임 사장으로 선임



MBC가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권재홍 MBC 부사장, 문철호 부산MBC 사장 등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김 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저녁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김 신임 사장 선임안이 통과됐다. 임기는 2020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3년이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MBC에 입사한 김 신임 사장은 MBC 보도국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이후 MBC 뉴스 파탄의 총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김 신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등 각종 정치와 선거 이슈를 편파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편집회의에서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완전 강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년 보도본부장이 된 뒤에는 MBC 메인 뉴스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김 신임 사장 선임은 방문진 이사회 내에서도 충돌을 빚었다. 방문진 여야 추천 이사들은 이사회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이사회 비공개를 주장했고, 야당 추천 이사들은 “MBC는 공영방송으로 사장 선임 과정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고영주 이사장은 공개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여야 추천 인원의 차이(정부·여당 추천 이사 6명 VS 야당 추천 이사 3명)로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퇴장을 했고, 결국 MBC 사장 선임은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방문진이 차기 사장을 선임하자 안광한 사장은 바로 이임사를 발표했다. 안 전 사장은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상암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 전환기의 사장으로서, 상암 시대를 제2의 창사 정신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부담 속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은 보람도 컸고 또 그만큼 힘든 과정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함께 해온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 신임 사장은 “나라가 혼란한 어려운 시기에 MBC를 흔들러는 세력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예능, 드라마 등 콘텐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사 보도 부문에서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게 중심을 잡고 경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임 사장의 앞길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MBC 구성원들은 2월 24일 아침 김 신임 사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MBC 노조는 “김장겸 씨는 기자의 팬을 빼앗았고,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언론 자유를 규정 한 헌법 21조와 MBC 방송 강령을 모두 위반한 인

물로 공영방송사 사장의 자격이 없다”며 “MBC 구성원들은 김장겸 씨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라며 “고위 간부들도 김장겸 체제에 줄 서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24일 “방문진은 MBC 뉴스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를 왜곡 보도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축소 보도하도록 한 자를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방문진과 자유한국당의 합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식물 미방위를 만들면서까지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 논의를 차단하고, 끝내 박근혜 정부 여당에 충성하는 인사를 통해 MBC를 장악하고 여론전의 보루로 삼겠다는 그 뻔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방송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근 저지라는 강한 내부 반발과 정치권의 비난에도 김 신임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출근길 마중을 나온 MBC 간부들과 인사를 나눠 김 신임 사장을 둘러싼 내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문진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김 신임 사장은) 길어야 3~4개월 시한부 사장이 될 수도 있다”며 MBC 내부 갈등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방문진법을 포함한 언론장악방지법은 여당의 버티기 전략으로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김 신임 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언제쯤 잦아들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역 MBC 노조 “‘낙하산’ ‘밀실’ 인사 거부한다”

출근길 항의 투쟁 진행

MBC 본사에 이어 지역 MBC에서도 신임 사장에 대한 출근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MBC는 3월 2일과 3일 주주총회를 통해 △MBC 충북 대표이사 사장에 김상운 씨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에 김일근 씨 △여수MBC 대표이사 사장에 심원택 씨 △목포MBC 대표이사 사장에 김현중 씨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에 이강세 씨 △울산MBC 대표이사 사장에 조상휘 씨를 선임했다. 제주MBC의 경우 김장겸 사장이 최재혁 씨를 신임 사장으로 선정했지만 주중에서 소주주 측의 반대로 선임

되지 못했다. 최재혁 씨는 현재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리로 부임한 상태다.

지역MBC 신임 사장 선임 소식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강원영동, 광주, 경남,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안동, 울산, 여수, 원주, 전주, 제주, 청주, 춘천, 충주, 포항 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 MBC에 투하된 낙하산 부역 언론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부 공동 성명을 통해 “박근혜 부역 언론인 김장겸과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들은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이들

을 지역 MBC 사장에 선임하거나 유임시켰다”며 “그나물예 그 밥이라는 표현마저 아까운 인물들로 서울 MBC와 지역MBC를 가득 채우고 말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지역MBC 구성원들이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던 공동상무제는 더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무용지물로 판명난 공동상무제는 오로지 인위적 통폐합을 위한 제도이기에 폐지가 당연하지만 김장겸은 오히려 무능한 공동 상무들을 재선임하며 여깅장을 놓았다”며 “일신의 영달만을 쫓던 이들을 지역사에 낙하산으로 내리꽂아 쫓겨나는 그 날까지 오로지 김장겸의 눈치만 살피며 경영이 아닌 통치 대리인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와 목포, 여수MBC는 3개 지부 공동의 성명을

또다시 내놓고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 지역 MBC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출근길 항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개 지부는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사장들은 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와 절친한 대학 동문이거나 MBC 공영성의 상징이었던 (PD수첩)을 무력화한 장본인”이라며 전형적인 밀실 인사라고 비판했다. 3개 지부는 이들 사장의 첫 출근일인 3월 6일 ‘낙하산 사장 반대’, ‘지역MBC 사장 선임 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제주MBC 지부도 출근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제주MBC 지부는 “최재혁 씨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의 특보 출신으로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 MBC를 만든 장본인이자 주축 부역자”라며 최재혁 직무대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국회 환노위, MBC 청문회 ‘연기’ 결정

“4개 교섭단체 간사 간 재논의로 일정 다시 정할 것”

MBC 청문회가 연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3일 회의를 열고 당초 2월 24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MBC 청문회를 여야 간사 간 재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의결했다. MBC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2월 28일 열기로 했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과 삼성전자 직업법 관련 청문회 역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교섭단체의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서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논란이 있는 만큼 청문회 일정은 변경하지만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께서 최대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일자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는 3월 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앞서 홍 위원장은 2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 간 사전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전원 퇴장했고, 여당의 퇴장 이후 야당은 MBC 노조 탄압 관련 청문회를 오는 24일에, 삼성전자와 이랜드파크의 청문회를 오는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음날인 2월 14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청문회가 의결된 것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월 15일과 16일에 이어 환노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한동안 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백선하 baek@kobeta.com

2월 23일 MBC ‘분노의 날’

MBC 노조 “공정방송, 우리 모두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았다. MBC 노조는 ‘MBC 노보 221호’를 통해 2월 23일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공정방송에 MBC 노조 조합원의 이름을 모두 걸었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2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을촌빌딩 앞에서 방문진 규탄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에는 상암동 MBC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차기 사장 후보 3인으로 거론된 권재홍 부사장과 문철호 부산MBC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왜 자격 미달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권재홍 부사장은 MBC 파업 과정과 그 이후 보도 부문 조합원들에게 대한 해고, 무더기 징계, 대규모 부당 전보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조합원들에게 ‘물리적 충격’까지 입힌 바 있다. 문철호 부산MBC 사장은 2011년 보도국장으로서 불공정 보도를 일선에서 지시한

인물이다. 노조 관계자는 “보도국장으로 있을 당시 공정 보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시종 묵살하고, 위로 아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2011년 이후 MBC 뉴스 파탄의 주역이자 총책임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MBC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영방송 MBC는 소수 권력자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그 배후에는 바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있다”며 “방문진이 다시 임기 2020년까지인 새 MBC 사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체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망상을 버리라”며 “탄핵당한 대통령의 보위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종편 재승인 심사’ 이번엔 제대로(?) 이번에도 역시나(?)

공정성 심사 강화한다고 했지만 자의적 판단 악용 가능성 있어
종편 여전히 ‘편파 방송’·‘콘텐츠 투자액’ 등 재승인 조건 이행 미흡
“MBN 미디어렐 사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해”



MBN을 제외한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전 재승인과 마찬가지로 방송주기가 심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완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는 끝났지만 위원들 간 논의를 거칠 문제들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 기본 계획

을 공개하면서 “종편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 않게 커진 만큼 종편도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가져가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 두 항목의 점수가 50% 이하일 경우 650점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승인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 핵심 항목에서 기준 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 승인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일각에서는 혹시 이번에는 조금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종편 대다수가 재승인 당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승인

취소에 해당하지만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해도 현재 흐름상 조건부 재승인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동안 정부의 심사 과정을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종편 바꾸기, 면죄부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방통위는 종편 특혜를 보장하고, 종편의 뒤를 따르는 집단이나 비관론을 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승인 심사를 똑바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번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첫 재승인 심사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중분류 항목인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

안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종편 미디어렐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 또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현재 미디어렐 심사 항목은 결합 판매 평가를 제외한 지상파 미디어렐의 심사 항목을 전용한 것”이라며 “이런 심사 항목은 2015년 MBN 미디어렐의 불법 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 1렐이라는 종편 미디어렐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불법·편법 협찬과 거래에 대한 방지 평가는 미디어렐의 ‘자율 규제’ 실적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또 감점 항목인 ‘시정 명령 및 과태료 횡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횡수는 건당 1점 감점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MBN 미디어렐 사례와 같이 2억4,000만 원이라는 과징금과 시정 조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건당 감점을 하는 방식은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종편은 광고 직접 영업이라는 특혜를 악용해 방송을 광고와 맞바꾸는 방식의 광고 영업을 하는 등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뒷전으로 던져버렸다”며 “방통위가 종편의 온갖 불법, 부당 행위들에 손 놓고 있는 사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 중립의 원칙들은 철저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CJ E&M 올해 4,500억 투자…‘믿고 보는 tvN’ 올해도 이어진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세계화에 기여할 것”



참신한 소재와 양질의 콘텐츠로 ‘믿고 보는 tvN’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tvN, 음악 전문 채널로 10대와 2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net, 장르 드라마와 시리즈물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OCN 등의 채널

을 갖고 있는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이 올해 미디어 사업 콘텐츠 전략을 공개했다.

CJ E&M은 2017년 미디어 사업 콘텐츠 전략을 공개하면서 올 한 해에만 방송 제작비로 4,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KBS나 MBC, SBS의 연간 제작비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2015년 지상파 전체 자체 제작비와 맞먹는 규모다. 콘텐츠 투자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응답하라 1988〉,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로 케이블 드라마 시청률 기록을 연이어 갱신하며 신드롬을 만들어낸 ‘드라마 왕국’ tvN은 올해도 〈시카고타자기〉, 〈공조〉 등 자체 제작 드라마와 〈신서유기3〉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연이어 선보이며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작사 관계자는 “tvN은 로맨스부터 가족물, 범정물, 수사물,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

르의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도 tvN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tvN이 지금보다 더 투자를 하고, 지상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마 지상파나 종편에서 tvN 드라마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vN은 또한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개국한 세계 최초 해외 전용 한국 영화 전문 채널인 ‘tvN Movies’를 통해 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tvN은 “이미 ‘tvN Movies’는 싱가포르에서 연간 200여 편의 한국 영화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국가로 진출을 위해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접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음악 전문 채널 Mnet은 〈고등래퍼〉, 〈너의 목소리가 보여4〉, 〈프로듀스101 시즌2〉, 〈소미더너미6〉

등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이번 달에는 출범 1주년을 맞은 Mnet의 디지털 채널 M2를 통해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음악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웰메이드 장르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OCN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투자해 〈보이스〉, 〈터널〉, 〈듀얼〉 등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 6편을 선보이고, 채널 CGV에서는 2039 세대를 타깃으로 한 소설 무비 매거진을 론칭할 예정이다.

올리브TV, 온스타일, XTM 등의 스타일 채널에서는 바쁜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춰 보다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생, 연령, 상황에 따른 타깃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성학 CJ E&M 미디어솔루션본부장은 “방송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데이터 기반의 신뢰도 높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남아·북미·유럽 등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 행복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 미디어·광고 시장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3월, 시청등급제가 달라진다

세부 분류 기준 구체화, 분류 사유 표시로 합리성·유용성 높여

지난해 12월 개정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청 지도 자료로서 시청등급제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프로그램 시청등급제는 방송 내용의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 ‘모든 연령’,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중 한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중 표시하는 제도로, 해로운 방송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먼저, 시청 등급 분류 기준의 경우, 기존의 ‘주제’, ‘폭력성’, ‘전정성’, ‘언어 사용’ 외에 ‘모방 위험’을 추가했으며, 세부 분류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더욱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청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5세 이상’과 ‘19세 이상’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 등급으로 분류한 사유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해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과 추상적인 분류 기준으로 시청 지도 자료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세 이상’ 등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돼 일부 방송사는 그 비율이 최고 90%를 웃돌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개정된 시청등급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개정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단신

SBS 라디오-박스, ‘오디오 콘텐츠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MOU 체결



SBS 라디오가 오디오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과 발전을 위해 박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BS라디오와 박스는 3월 2일 서울 SBS 목동 사옥에서 ‘오디오 콘텐츠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MOU

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태익 SBS 라디오센터장과 양주일 박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오디오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 시너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오디오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팟티(POD TY) 애플리케이션에서 SBS 라디오 콘텐츠를 청취할 수 있다. SBS ‘두시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박선영의 씨네타운’, ‘박소현의 러브게임’, ‘미국주의 영스트리트’와 같은 SBS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SBS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정지영의 스위트뮤직박스’ 등의 중영 방송까지도 순차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정태익 SBS라디오 센터장은 “오디오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장 상황에서 박스와 SBS 라디오센터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팟티’에

서 SBS라디오 콘텐츠 제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일 박스 대표는 “앞선 기획력과 호응 높은 콘텐츠로 라디오 시장을 선도해 온 SBS 라디오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디오 시장을 무대로 다양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EBS, 모바일 네이버 주제판 ‘스쿨잼’ 오픈

EBS와 네이버는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초등학교 사용자들을 위한 신규 모바일 주제판 ‘스쿨잼’을 3월 2일 오픈했다.

스쿨잼은 초등학교생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읽을거리·볼거리를 제공하고,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 등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EBS는 “EBS와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쿨잼은 최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해 아이들의 행복 교육 정착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EBS가 보유한 광범위한 초등 교육 콘텐츠와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네이버(www.naver.com/m.naver.com)에 탑재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스쿨잼의 주요 특징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 전면 배치 △학교생활에 필요한 인성, 인문학 지식, 속담, 한자, 역사, 과학 상식 등 제공 △‘고민해결소’와 ‘속제해결소’ 등 참여형 콘텐츠 편성 △매거진 영역 편성 등이다.

EBS 관계자는 “그 외에도 모바일 웹툰형, 스쿨잼 TV 등을 제공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교 밖 교실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BS와 네이버는 스쿨잼 출시를 기념해 3월부터 스쿨잼 주제판 설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중계] OBS 경영 진단 긴급 토론회-정리해고는 OBS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최악의 위기 OBS,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다



김경률 회계사



김기덕 변호사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박홍근 의원



추혜선 의원



유진영 OBS지부장



이영주 성균관대 교수



손철호 경영 컨설턴트

지속적인 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수지를 맞췄던 OBS 사측이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정리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OBS 사측은 꾀쩍도 하지 않고 있다. OBS가 처한 현실은 한 마디로 산이 앞을 가로막고 물줄기도 끊어져 더 나아갈 길조차 없는 산궁수진(山窮水盡)의 형국이다. 이 같은 답답함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OBS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OBS 구성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계, 업계 전문가, 정치권 모두 대안을 내놓고 있는 의견이 엇갈려 후속 조치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OBS 사측, ‘무위(無爲) 경영’에 구조조정까지…“경영 의지 보이지 않아”

2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OBS 경영 진단 긴급 토론회-정리해고는 OBS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에는 공동 주최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률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손철호 경영 컨설턴트, 유진영 OBS희망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영주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유진영 OBS노조위원장장은 “OBS의 경영은 한 마디로 ‘무위(無爲) 경영’”이라고 정의했다. 유 위원장은 “2006년 개국 준비부터 2017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10명의 사장이 교체됐는데 그만큼 경영이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경영 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OBS 관계자는 “OBS 수익을 보면 다른 방송사와 달리 광고와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익 구조 자체가 무위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종합편성채널 개국과 미디어랩 도입 등 급변하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위 경영보다 더 큰 문제는 사측이 수익 확대에 대한 노력 없이 인건비 절감을 유일한 경영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 9년간 인건비를 통한 절감액이 55억 원에 이르지만 증자는 41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시장의 변동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수용해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의 논리적 근거로 악용하는 등 경영의 최대 행위와 비전을 오로지 인건비로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측은 지난해 경영 예측 자료를 통해 영업손익이 2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는 5억 원 수준에 그쳤다. 또 올해 광고 예측액 역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내놓은 최저치에 -7배를 내놓았다.

물론 최근 몇 년째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OBS의 광고 매출도 줄어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OBS는 별다른 사업 확장 없이 매년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무제표에 따르면 OBS는 2012년 56억 원, 2013년 16억 원, 2014년 14억 원, 2015년 6억 원의 수익을 냈다.

김경률 회계사는 “OBS가 개국 1년 만인 2008년 12월 31일에 경영 위기를 선언하면서 비상경영안을 내놓았는데 2010년 OBS의 부채 비율을 보면 13%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방송 시설 등 투자액은 2012년 5억 원, 2013년 1억 원, 2014년 3,000만 원, 2015년 1억 원으로 절대액이 작을 뿐 아니라 감가상각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투자도 하지 않고 매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기 상황인가”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방송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산 규모인데 왜 방송 사업을 시작했는지,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철호 경영 컨설턴트는 “사업 목적이 무조건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OBS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대표이사 회장의 경영 전략은 ‘보도와 구매’라고 정리했다. 보도 기능만 열추 갖고 나머지 편성은 구매를 통해 맞추겠다는 것이다.

손 컨설턴트의 발언에 김기덕 변호사는 “방송이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백성학 회장의 전략은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방송사에 허가를 내주고, 재허가를 하는 것 역시 공공성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러한 경영 태도를 반영해 재허가를 불허하고 다른 사업자를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OBS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라고, 재허가를 내줬는데 (OBS 사측은)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OBS 조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백성학 회장의 경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안 놓고 의견 분분…속 시원한 해답은 도대체 어디에?

하지만 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참석자 모두의 의견이 엇갈렸다. OBS 구성원인 유진영 노조위원장은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방송 사유화를 막고 소중한 경인 지역의 공적

2017년 코바코 광고 예상과 사측의 광고 예상액 비교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F)	2017년(F)	
		낙관적	비관적
코바코 분석 지상파 2017년 광고 예측액	16,183	17,000(+5%)	15,700(-3%)
OBS 경인TV광고 예측액	218.9	180.0(-21%)	

2016년 9월 OBS 경영 예측 자료와 2016년 실제 결산 비교

(단위 : 억 원)

구분	OBS 경영 예측 자료 (2016년 9월 8일)*19명 감원 전제	OBS 실제 결산 자료 (2017년 2월 3일)
영업손익	-20.4	-5.6
당기손익	-24.7	-8.7

자산인 지역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경인 지역 시청주권 확립과 지역 방송 바로 세우기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공익적 지역 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동철 OBS PD는 지자체가 나서 지역 방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BS도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tbs교통방송처럼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 지적이다. 전 PD는 “방송법에 지자체만 넣어서 개정하면 된다”며 “인천광역시나 경기도가 OBS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OBS 노사가 힘을 모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OBS의 수익 구조를 보면 ‘실시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가 전혀 없다”며 “지역 민방만 하더라도 SBS와 같이 소송을 하는 등 콘텐츠 협상력을 갖고 있는데 OBS는 콘텐츠 협상력이 아예 없다. 이것은 온전히 사측의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실시간 방송만으론 안 된다”며 “경인 지역 시청자를 타깃으로 놓고 새로운 편성과 콘텐츠 유통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 시절부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여러 플랫폼 사업자를 만나 OBS CPS 문제를 논의했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OBS에서 CPS를 말하지 않는다’, ‘CPS를 지불할 만한 파워 콘텐츠가 없다’였다”며 OBS의 생존 전략이 부채함을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에서 OBS에 러프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더 이상 생존 전략을 내놓지 않는다면 퇴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현재 방통위는 OBS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철호 경영 컨설턴트는 “냉정하게 방통위 등 정책당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 현실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대주주에 대한 이

해와 설득 없이 정책적 대안으로 OBS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답은 대주주 설득밖에 없다는 의미다. 손 컨설턴트는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억대가 들어가지만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돌아오는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없는 소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대주주를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덕 변호사는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의 투자 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백 회장이 미국의 지게차 회사인 클라크를 인수했는데 역시나 OBS 운영 방식과 동일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기술로만 운영되 해마다 구조조정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OBS에 해운 방식 그대로”라며 앞으로도 이 방식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만약 방통위에 방송사 지분 관계 정리 권한이 없다면 재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리에 있던 한 OBS 구성원도 “공익적 민영방송인 OBS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조진부 재허가를 내줘도 잠깐뿐 OBS 대주주는 바뀔 사람들이 아니기에 법대로 재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재허가 취소에 동의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역시나 답은 없었다. 이날 이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OBS 구성원, 지역 주민 등 모두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내놓은 대안들을 모아 정책 당국인 방통위,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 OBS 사측과 노조가 함께 논의한다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그래도 포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GSMA

MWC 2017 폐막... 키워드는 'AI' '자율주행' 'IoT'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바일, 다음의 요소(Mobile, The Next Element)'라는 주제로 열린 MWC 2017은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지만 MWC에서만 볼 수 있는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나 기술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가전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AI 대중화 시대 오나

전 세계 204개국, 2200여 개 기업,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MWC 2017은 모바일 그 이후 또는 모바일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열리는 거의 모든 전시회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AI와 자율주행차, IoT, VR, 드론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AI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I 스피커 '누구(NUGU)'와 SK C&C가 만든 '에이브릴(IBM 왓슨 기반)'을 결합한 서비스를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또 소셜봇(Social Bot), 유아용 토이봇(Toy Bot), 누구와 연동한 펫봇과 커머스봇 등 다양한 차세대 AI 로봇을 공개했다.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은 "누구"를 시작으로 음성 인식과 AI가 생활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꿔 가는 'AI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며 "공유·개방을 통해 AI 생태계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WC 2017 개막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KT가 출시한 AI 비서 '기가지니'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황 회장은 "개막 전날 열린 GSMA 이사회에서 기가지니가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소개됐다"며 "인터넷TV(IPTV)는 물론이고 스마트홈까지 음성으로 제어하는 기가지니를 보고 많은 사업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AI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AI와 IoT,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ICT는 물론이고 전체 산업을 움직일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MWC 2017에서 새로운 AI 기술이 공개되지는 않았다"며 "다 지난해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서비스여서 조금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MWC 2017에서 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5G는 빠른 속도, 끊김 없는 연결, 방대한 용량과 함께 '지능화'로 차별화된 네트워크"라며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5G 시대가 오면 세상이 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빨리 5G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터쇼 뺄치는 MWC

MWC 2017도 이전 다른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모터쇼를 방불케 했다. BMW·포드·푸조·재규어·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SK텔레콤·버라

이즌 등 이동통신사, 반도체 기업인 인텔까지 자율주행 산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SK텔레콤이 전시한 'T5'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BMW코리아와 함께 공개한 것으로 20G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1000분의 1초 단위로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속 170Km의 초고속 주행에서 3.6Gbps 속도로 통신하는 데 성공해 세계 최초의 초고속·초저지연 5G 자율주행차라는 기록을 세웠다.

인텔은 부스 전면을 자동차로 꾸민 뒤 BMW·모바일이와 함께 만든 자율주행차 실물을 전시했다. BMW는 MWC가 열린 바르셀로나에서 실제 도로 주행을 펼쳐 큰 관심을 받았다. 푸조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IoT 플랫폼 '아틱'을 탑재한 자율주행 콘셉트차인 '인스팅트'를 공개했다. 아틱은 각종 스마트 기기, IoT가 적용된 가전제품 등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저장해두는 IoT 플랫폼으로 인스팅트의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자 생활 패턴 분석 등에 활용된다. 벤츠는 자율주행은 물론 전기구동, 정보 공유 및 서비스 등 미래 자동차의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에릭슨은 170Km의 고속 이동 상황에서 1Gbps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G 기반 자율주행차와 고화질 미디어를 전송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내놓았다. 또 글로벌 프린트 제조 업체인 휴렛팩커드(HP)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 'iau'를 탑재한 차량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 방' 없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ICT 신기술을 선보이는 '넥스테크(NEXTech)'홀을 신설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중

소·벤처기업들이 모인 넥스테크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드론이었다. 세계 1위 소비자용 드론 제조사인 중국의 DJI는 올해 처음 MWC에 전시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드론을 선보였다. 고성능 카메라 지지대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인 '매트리스 200'은 고층 빌딩, 송전탑, 풍력 발전소 등 시설을 점검하거나 자연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업체인 '드론앤베이스'는 태블릿 PC와 연동해 비행 전투 게임을 벌일 수 있는 드론을 공개했다. 태블릿 PC로 드론을 공중에 띄운 뒤, 증강현실(AR) 기술로 태블릿 PC 화면에 나타난 적과 싸워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참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MWC 2016의 주인공이었지만 올해는 AI와 자율주행에 자리를 내준 VR 산업은 조금 시들해진 느낌이었다.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업체 등에서 이를 소개하기 위해 VR를 적극 활용해 많은 전시관에서 VR 체험이 가능했지만 기술적으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도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도 선보이고, 기술적 진보도 있었으나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며 "VR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도 지난해만큼의 관심은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모바일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MWC는 분명 모바일 행사인데 다른 ICT 기술에 밀려 모바일 관련 분야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우열을 다투는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내놓지 않았고, LG전자를 비롯해 화웨이, 소니, 노키아 등의 기업들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는 않았다. LG전자는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5.7인치 대화면, 18대9 비율 디스플레이, 방수·방진 기능, 배터리 사고 방지용 히트파이프 탑재 등 기본기를 탄탄히 했다. 업계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IT 전문가 테크크런치는 "스마트폰은 오버 스펙 경쟁보다는 사용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LG전자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평했으며, 더버지는 "G6는 최근 LG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중 가장 훌륭한 제품"이라며 "18대9 화면 비율을 적용해 큰 스크린임에도 한 손으로 쓰기 편한 기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밀실타파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며칠 전 조디 포스터 주연의 2002년 작 ‘Panic Room’이란 영화를 보았다.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오자 엄마인 조디 포스터와 당뇨병을 앓는 어린 딸이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밀실(Panic Room)에 들어가서 강도와 생존 게임을 하는 내용이다. 영화의 밀실에서는 집 안 곳곳의 CCTV를 통해서 강도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강도들은 두 모녀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일종의 정보 비대칭이 생기고, 영화의 전반부에는 두 모녀가 훨씬 유리한 환경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 후반부에는 두 모녀가 밀실에만 머무를 수 없는 요소들을 여럿 배치해 긴장감이 높아지게 된다.

정상적인 정권 교체에 경우 ‘정권 인수위원회’란 것을 통해서 새 정부의 Infra를 만들게 된다. 지난 정부(아직은 현 정부)도 인수위를 통해 정부 조직을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근 ‘보안’이다. 아무래도 계획이 미리 알려져서 김새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품도 안 나고, 해당 부처에서는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밀실에서 야전집대 들여다 놓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밀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영화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보안을 제1덕목으로 삼아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가령 화폐 개혁이나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 보안이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안은 정보의 비

대칭이 부의 불법적인 쏠림을 낳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그 무슨 철통 보안이 필요했을까? 국정교과서 내용 때문에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나올까 봐? 고구려 시대에 만주에 땅을 못 사놓은 것이 두고 두고 후회가 될까 봐? 어느 날 갑자기 해경을 해체했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영 못하는 해경들이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혹시 ‘내가 새로 소속될 부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수영을 못하는 해경인 내가 갑자기 수영을 잘하게 됐다’던지 ‘나의 수영 실력의 8할은 내가 몸담고 있는 새로운 부처의 이름 때문이다’라면 또 모를까.

방송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물 중의 하나는 ‘미래부의 탄생’과 ‘과기부의 해체’였다. 미래부는 주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순수 과학의 영역인 과기부 업무도 하도록 했다. 그래서인지 직업 공무원의 꽃이라는 차관직도 미래부는 대부분 ICT 분야의 인사로 채워왔다. 그러면서도 주로 순수 과학 분야의 최고봉에 수여하는 노벨상을 탐한다. 일본은 겁나 잘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필자는 현재 Applied Science나 Engineering 영역의 일을 하지만, 한때

는 슈뢰딩거나 파인만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순수 과학을 지향했던 사람으로서, 과기부가 속절없이 미래부에 통합되는 것을 보고는 헤어진 옛 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알게 된 사람처럼 가슴이 아렸었다. 레알. 구멍가게라면 계절이나 시류에 따라 잘 팔리는 물건을 중심으로 ‘몰빵’을 해도 좋지만, 정부 정도의 조직이라면 순수와 응용과학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혼자 사는 자식이 정말로 미운 것은 아니다. 제목처럼 진짜 미워서라면 자식 놈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의절을 하는 것이 맞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지원 그 자체보다 관심일 것이다. 최소한 관심이 있는 척이라도. 한류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가 과연 온전히 사드 때문뿐일까? 교통이 아무리 불편한 곳에 있어도 맛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다. 더욱이 교통 불편한 맛집 주위로 도로가 새로 생기듯이 콘텐츠 유통 경로는 갈수록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주위에서는 2013년 이후 콘텐츠 진흥의 소관 부처가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로 나뉘어서 유기적인 추진이 어려웠다고들 한다. 융합시대에 걸맞게 C-P-N-D 사슬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칸막이를 쳐서 시대를 선도하는 콘텐츠 포맷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요즘 SNS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전짜시(전지적 짝사랑 시점)’ 같은 포맷을 상상이나 했을 것 같지 않다. 밀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칼로 무 베듯 정리한 것이 넘나 폼나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진흥은 과학에 비유하자면 물리가 아니라 화학에 가깝다. 반응의 과정과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정권 인수위원회’란 것을 꾸릴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쩌면 효용성이라는 명목 아래 더욱 밀실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 나오는 문구처럼 밀실은 점점 더 푸집해지고 광장은 죽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죽어가는 광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밀실을 타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비선에 데일 만큼 데이지 않았는가? 더 이상 ‘코너링 연습’이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

2013년 이후 콘텐츠 진흥의 소관 부처가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로 나뉘어서 유기적인 추진이 어려웠다고들 한다. 융합시대에 걸맞게 C-P-N-D 사슬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칸막이를 쳐서 시대를 선도하는 콘텐츠 포맷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설

UHD 방송기술 전문 인력 육성 시급하다!!

UHD 지상파 시험 방송이 2월 말 시작됐다. 5월 31일 수도권 본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에는 광역시와 평창, 강릉 지역으로 확대 송출 예정인 UHD 방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다.

2014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살펴보면, 5년 동안 TV 수상기 등을 포함한 직접 생산 유발효과만 4조4천억 원, 한류 콘텐츠 수출과 관광 사업, 광고나 게임 같은 연관 산업으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용 부문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21만 개가 생기는 것으로 연구됐다.

시청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영상的高质量화뿐만 아니라, HD 모바일, IP 커넥티드, 재난 방송 시각화 등 방통 융합이나 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를 가능하게 해 시청자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시청자에게 고부가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며,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UHD 방송을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앞서 한국이 최초로 지상파로 송출한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HD TV 전환 시기에서 선도적인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통해 국내 가전사가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고 한류 문화의 확산이라는 크나큰 성과를 얻어낸 결과에서 보듯, 이번 UHD 전환 또한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UHD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UHD 제작·송출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시청자의 신뢰를 선점해갈 수 있는 방송

기술 인력 양성이 먼저 뒷받침돼야 함은 분명하다.

과거 HD TV 전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파일 기반 제작 시스템 구축, 고품질 영상 처리, 안정적 송출 시스템 등 방송기술인들의 디지털 역량과 방송기술인 육성을 위한 국가적 교육 자원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UHD 전환 사업에 있어서 정부 기관은 과거와 달리 송출 허용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듯, 제작·송출·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력 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UHD 서비스 초기 과정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미완성 서비스로 인한 신뢰 저하를 불러올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현재 자체 연구원에서 교육을 준비해 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KBS와 MBC뿐이다. 이마저도 지상파 4사 기준 2조 원 이상의 재정 압박으로 교육 횟수나 수준은 매우 미미하며, SBS나 기타 방송사는 연수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여력조차도 없다고 한다. 이렇듯 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보니,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안정적 송출 환경 구성을 위한 기반이 UHD 방송 초기부터 흔들릴까 우려된다.

UHD 사업은 시작보다는 성공적 서비스로의 귀결이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논란이 됐던 UHD 본방송이 정리된 현 시점에서 필요 사항을 조속히 검토·분석하고 적극 지원해야 성공적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방송기술 인력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미래 방송기술 인력의 육성으로 방송 산업 성장을 이끌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박종석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편집주간 유주열	전화 02-3219-5637
편집위원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트위터 @kobetajournal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페이스북 @kobetajournal
인쇄인 SJC성전	홈페이지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저열한 아웃소싱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노사 관계 파행과 방송 재심의 상황에 놓인 OBS에서 근거도 없는 아웃소싱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은퇴 후 생활 자금인 퇴직금조차 내놓으며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마당에 아웃소싱으로 배신하는 OBS 경영진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나 주조정실과 조명을 외주화하려는 시도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고화질 UHD 방송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영상의 기본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명은 단기간에 전문 역량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업무로, 직무 안정성 저하 시 콘텐츠 품질 악화로 즉각 이어지는 핵심 업무인 것이다. 그리고 주조종실은 모든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최종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방송사 내 그 어느 부서보다 책임이 무겁고 사고로 인한 대내외 영향이 극심해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규직 유지는 필수다. 전체적인 방송 프로세스의 기본도 모르는 듯, 주조정실과 조명을 아웃소싱한다는 소문에는 과연 방송사 경영진이었던가? 큰 의구심이 든다.

이제 곧 UHD 시험방송이 시작된다. 그리고 미디어가 IP, 모바일, 커넥티드 카, IoT 등 타 산업 및 기술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빅뱅을 시작해가는 시기인 것이다. 세계적 미디어 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미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방송기술 핵심 직무에 대한 외주

화가 웬 말인가!

노사가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보자고 복돋워야 하는 시점에서, 방송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방송기술 인력의 외주화 시도를 통해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경영을 그만두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충분하기에, 그 무책임함과 뻔뻔함에 다시금 분노가 치민다.

OBS는 방송기술인에 대한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방송 기본에 대한 몰이해 속에 부도덕한 정리해고를 감행한다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 3. 7.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저널 연합회원 원고 모집 공고

방송기술저널에서는 연합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글이 게재될 수 있도록 연합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량 자유

주제 자유

제출 이메일 baek@kobeta.com

KOBA 2017
www.kobashow.com



27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